

[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포럼 토의자료]

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환적인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남북관계와 시사점

2018. 9. 20. (목)

강릉원주대학교 교수 : 이 태 연

순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개요 | 1 |
| II. 주요 논의 사항 | 2 |
| III. 추진 방향 및 시사점 | 10 |
| IV. 결론 | 12 |

I. 개요

1. 일시 : 2018년 9월 20일(목) 18:00~18:30
2. 장소 :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과학기술대학1호관 3층 325호실
3. 발표자 : 이태연 교수(강릉원주대학교)
4. 주제 :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환적인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남북관계와 시사점

II. 주요 논의 사항

○ 발제내용

-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3차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대적 시각

1. 서언

- 1,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전환적인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실증하고 있음.
 - 분단 이래 단 2회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이 올해만 세 차례 개최, 남북관계가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
 -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 이어,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·평화정착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
- 한반도 비핵화·평화정착 과정 본격 진전 노력 지속
 -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, 북미가 적대관계의 불신을 걷고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
 -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동시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촉진
-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 추동
 - 「판문점선언」 이행 상황을 정상 간에 확인,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논의
 -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 추진,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의 여건 마련
- 정상 간 소통 정례화 및 신뢰 구축
 - 「판문점선언」에서 합의한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이 실현됨으로써, 정상 차원의 소통이 사실상 정례화
 - 11년 만에 평양에서 2박3일의 충분한 시간 동안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신뢰 관계 구축

2. 토의 사항

1)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?

□ 위협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

- 「 없는 한반도」 구현을 위해 무력충돌 요인의 근원적 해소
 - 군사분계선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상호 중단(남 4.23, 북 4.24)하였으며, 선전수단 철폐도 신속하게 완료(5.1~4)
 - 남북 군사당국간 연락채널을 복원, 우발적 충돌 방지 체계 구축
 - ※ 서해지역 남-북 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재개(7.1)
 - ※ 서해지구 군통신 정상화(7.16), 동해지구 군통신 정상화(8.15)
- 남-북 군사당국대화 정례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 견인
 - 장성급군사회담(6.14, 7.31)과 실무협의(9.13) 등 군사당국대화를 지속
 - DMZ 평화지대화 및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포함하는 '포괄적 합의서' 체결을 논의,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

□ 신뢰와 상호 존중을 토대로 남북관계 정상화

-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복원(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→ 남-북 특사 교환방문→ 남-북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등), 「판문점선언」 이후 정상화
- 남-북 정상이 일상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신뢰관계 형성
 -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를 개통(4.20)하였으며,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(5.26)
- 남북대화 정례화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통한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 제고
 - 남북고위급회담(6.1, 8.13)과 분야별 회담 개최 및 정례화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의의 틀 구축
 -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문제들을 남북이 상시적으로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(9.14)
- 철도·도로 연결 등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 전개
 - 철도·도로, 산림분야 남북공동점검 및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여건을 우선 조성,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 예정
 - * (철도)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 (동해선 7.20, 경의선 7.24)
 - * (도로) 경의선 북측구간 현지조사 (8.13-20)
 - * (산림)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금강산 현장조사(8.8)

□ 남북이 함께하는 경험을 축적, 민족동질성을 자연스럽게 회복

- 8.15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차질없이 개최(지난 상봉 이후 3년만)

- 총 170가족(남 : 89, 북 : 81)이 8.20~26간 금강산에서 상봉, 개별상봉 시간 증가(2→3시간), 이산가족 동선 최소화 등 상봉방식 개선

○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 공연을 통해 남북문화교류 지속

-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한 예술단 방남공연(2.8-11)과 우리 예술단 방북공연(4.1, '봄이 온다')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한편, 정례화* 방안 협의

* 8.13 제4차 고위급회담시, 북측 예술단 방남 공연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합의

○ 체육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(남북 단일팀 구성 및 공동진출, 남북 선수단 교환경기 등)

- 「남북통일농구대회*」 개최(7.3-6, 평양), 「2018 아시안게임(8.18-9.2, 자카르타-팔렘방)」 및 「장애인 아시안 게임(10.6-13, 자카르타)」 남북 단일팀 구성 및 공동입장, 「세계유도선수권대회(9.20-27, 아제르바이잔)」 단일팀 구성 등

○ 다양한 분야(종교·사회·문화·체육·언론 등)에서의 민간차원 남북교류도 확대

- JTBC(7.9-12)·민화협 방북(7.16-19), 평양 국제유소년축구대회(8.10-19)·민주평통 주최 한민족평화포럼 개최(8.22-25, 심양) 등

○ 「개성 만월대」 발굴 등 남북간 역사·문화협력사업도 추진

- 「개성 만월대」 공동발굴 사업 재개(9.27-12.27, 3개월)
- 향후 「겨레말 큰사전」 편찬 사업 재개 및 공동편찬위원회 개최 등 추진

2) **현 상황에 비추어 남북 관계 진전의 중요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?**

1. 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병행하여 진전시켜 가는 전략으로 활용

문제인 정부 출범 당시, 한반도 상황은 안보 불안이 최고조

- 북핵·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악순환, 군사적 긴장 고조

-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한국 국민의 몫이지만,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우리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 지속

문제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정착의 핵심 축으로 활용

- 과거 남북간 대화가 활발할 때, 북핵문제의 진전을 이루고,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역사적 경험에 바탕

※ △'98년 금창리 의혹 발생시, 우리 구상을 미측에 전달, '페리프로세스'에 참고

△'05년 6자회담 교착시 대북 특사파견을 통해 「9.19 공동성명」 채택 유도

△'07년 BDA 문제 대두시, 우리측 평화체제 구상을 미측에 전달, 「2.13 합의」 체결 촉진

-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면서 진전하는 관계라는 인식에

□ 전략은 상호 '진진' 전략이지 상호 '제한' 전략이 아님.

-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 중 필요하면 어느 한 쪽이라도 앞서가서 다른 한 쪽의 진전을 '견인'해 준다는 적극적 상황타개 전략
 - 즉, 남북관계가 먼저냐, 비핵화가 먼저냐의 先後의 문제가 아니라, 어느 한쪽의 논의가 정제되었을 때, 다른 쪽의 진전을 이룸으로써 결과적으로 함께 개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
- 따라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, 그리고 비핵화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면 더욱 남북관계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음.

2. 정상화 및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역할이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음.

□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

- 2017년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.(북한은 2017년 한 차례의 핵실험과 1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, 미국은 '군사적 옵션'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)
-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간 화해·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「베를린 구상(17.7.6)」과 「문재인의 한반도정책(17.11)」을 발표
 - 이후 주기마다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, 북한이 우리의 대북정책을 신뢰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여건 조성
- 올해 1.1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우리측 노력에 호응,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
 -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, 남-북 특사 교환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 과정 시작
- 남북관계 복원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급속히 완화

□ 북한 비핵화 설득, 북한의 전략적 결단 유도

-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(3월)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·평화체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이 핵·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·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,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으로 연결
 - 북한은 작년 11.29 이후 추가적인 핵·미사일 시험을 중단, 올해 4.20에는 핵·ICBM 시험 모라토리움을 공식 선언하고, '핵·경제 병진'→ '경제중심 新전략노선'으로의 전환 공표(당 중앙위 전원회의)
 - 전략변경의 배경에는 비핵화 없이는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작용
- 이러한 북한의 결단은 4.27 「판문점선언」에서 남북 정상간 '완전한 비핵화'와 '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'에 합의로 연결
 - 결국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 내는데 남북관계가 결정적 기여

-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
 - '경제'중심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모든 주민들에게 발표, 이제는 핵무기가 아닌 경제발전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
 - 5.24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였으며,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절차도 진행하는 등 실천적 조치 단행
 - 9.5 대북 특사단 방북 시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*

□ **진전을 계기로 북미대화 및 비핵화 논의 진전**

- 남북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6.12 북미정상회담이 개최, 4.27 「판문점선언」 합의사항을 재확인 하는 한편, 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개시
 - 대북특사 파견(3월)시 파악한 북미대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미측에 전달,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 성사
- 북미간 논의과정에서도 「한-미」, 「남-북」간 협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중재·조정,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
 - 특히,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5.26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'남북 관계'가 중요한 역할
- 이처럼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개선과정에서 '산파'이자 '문제해결자'의 역할을 수행
 - 북미간 신뢰가 부족한 초기에 북미정상간 만남을 주선하고,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 주는 역할 수행

3)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?

□ **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, 「남북관계-비핵화 선순환 구도」 마련**

-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지원, 비핵화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선순환 구도 마련
 - 「한반도 신경제구상」 등을 통해 북한이 '핵'과 '미사일'이 아닌 '경제'와 '남북관계'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
-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내부적으로 비핵화 동력 유지하는데도 필요
 - 비핵화 결단이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비핵화와 개혁·개방에의 긍정적 변화의 폭이 확대, 결과적으로 비핵화 과정이 가속화

- 「**변영의 선순환**」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달성,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
 -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, 저출산과 고령화, 글로벌 무역분쟁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
 - 남북관계 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, '코리아 디스카운트' 문제 해결에 실질적 효과
 - 더 나아가 남북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을 넘어 대륙으로까지 확대, 우리 경제의 新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
 - 철도·도로 등 남북 교통망 연결은 남북의 경계를 허물고 발전·확장의 가능성을 만드는 초석, 그런 의미에서 TSR/TCR로의 연결은 북한이 아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
 - 「한반도 신경제구상」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가 일어나고, 고용이 창출되며, 남북을 넘어 동북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

□ **한반도 중심의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은 과정에서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협력 기회 창출**

- 영토 분쟁과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북아를 상생·공영의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는데 기여
- 「문재인의 한반도정책」은 대륙과 해양의 연결고리인 한반도를 축으로 동북아 관련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함으로써,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의도
 - 특히, 「한반도 신경제구상」으로 주변국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,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가 이루어진다면, 해묵은 동북아 갈등구조 해소 가능, 동북아 차원의 평화·번영 실현

□ **궁극적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및 통일로 가는 과정**

- 분단의 극복과 통일 지향은 민족의 역사적 책무
 -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, 통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.
 - 통일 과정에서 관련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, 통일은 결국 남북이 주체가 되어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
- '평화적' 통일 과정은 지속적·점진적으로 쉼없이 진행되어야 함.
 -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·협력을 확대, 남북 주민간 접촉면을 넓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, 민족공동체를 회복, 통일을 준비
- 남북관계는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측의 주도적 역할에 기여
 -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남북간 대화가 활발할 때, 주변국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, 우리의 입장을 경청하며,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효과를 발휘
 - 만약,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라면 한반도 문제 논의과정에서 우리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음.

Ⅲ. 추진방향 및 시사점

□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방향

-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'평화경제, 동북아 경제 공동체 실현' 비전 천명
- 「관문점선언」과 북미간 「센토사선언」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향한 과정 본격화
-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통해 우리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시점

□ 「-경제 선순환」, 구조 정착,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 실현

- 평화는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, 경제협력의 확대는 평화를 촉진, 평화와 경제는 서로 떼어 수 없는 불가분의 상호 발전적 관계
- 남북간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은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더욱 공고한 평화 달성을 촉진, 경제통합 여건 조성
- 호혜성에 기반한 남북 경제통합은 적극적인 평화 촉진 수단이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해법
- 남북 모두가 'win-win', 실질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공동번영 방도
- 북한의 경제발전과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편입을 통한 체제 보장으로, '핵'과 '미사일'을 포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
- 동시에, 저출산·고령화, 대외 무역갈등 심화, 내수시장 규모 한계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,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
-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차원의 평화번영에 기여, 새로운 협력 질서 창출
-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,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직결되며, 경제공동체 역시 비핵화·평화정착 과정과 연계되어 관련국들간 협력 구도 속에서 실현 가능
- 「한반도 신경제구상」을 통해 남북한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경제협력 추진,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→경제→평화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질서 창출

□ 기대 효과

- '코리아 디스카운트' 해소 및 군축 실현은 직접적 경제적 효과로 연결
-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, 해외투자 증대, 기업 가치 상승(주식) 및 국가전략사업·미래첨단산업 부문 투자 확대 가능
- 남북 경협 확대와 동북아 경제 통합은 대륙과 해양의 '교량국가'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- 남북 경협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(신규 투자 확대, 일자리 창출, 남북간 시장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)

- , 철도·도로 등 남북 교통망 연결은 동북아와 유라시아에 걸친 철도·물류공동체로 발전
- '경제적 혈관'인 물류를 기반으로 에너지·자원 협력 등 연계와 확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로 이어지는 단일의 경제권과 공동시장 형성 촉진
- **남남갈등 완화 및 남북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기대**
 - 평화가 제도화되고 번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남남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, 사회 전반의 갈등 비용을 줄임으로써,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
 - 남북간 경제격차가 해소됨으로써 통일 비용 감소 효과,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부정적 인식도 해소에 기여

V. 결 론

□ 남북간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,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.

- 「판문점선언」을 충실히 이행, 남북관계의 확대·발전 도모
 -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상화 및 분야별 남북대화 정례화 등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기반 확립
 - DMZ 평화지대화, 서해 평화수역 조성,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구체화,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실현, 전쟁 위험 실질적 감소
 -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차원의 사안들의 근본적 해결 노력도 지속, 분단이 남긴 상처 치유
 - 역사·종교·사회문화·체육·예술 등 남북간 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·협력을 확대, 남북간 실질적인 통합을 추구
 - 철도·도로 등 경제협력은 공동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진행,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 향후 본격 추진에 대비한 여건 조성에 주력
- 「판문점선언」 이행 과정에서의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도 기여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임.
 - 남북대화의 여러 채널을 통해 북미간 입장을 증재하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여, 북미간 협상 국면의 유지·진전을 지원·보장
 -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간 상시적 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,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수 있게 하는 기반
 - '한반도 신경제구상' 역시, 북한이 '밝은 미래'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, 비핵화 포기시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하는 효과

○ 3 ‘남북정상회담’(9.18-20)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통일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- 「판문점선언」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중점 논의, 향후 남북관계 진전 동력 확보

□ **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 강화**

○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과정의 긍정적 선순환을 통해 비핵·평화프로세스의 후퇴를 방지하고, 상호 진전을 추동하는 구도를 보다 강화

- 아울러, 핵·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한 북한의 선택이 옳았음을 북한 스스로 확신하게 하는 노력 지속,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3차 ‘남북정상회담’(9.18-20, 평양)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, ‘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’을 위한 도약 계기 마련에 주력

- 무엇보다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양 정상간 협의,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 과정의 진전을 이루어 내는데 전력 경주

- 북미간 신뢰와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, 우리가 북미대화를 유지·촉진시키는 역할을 통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동력 마련 필요

- 아울러, 우리 정부가 북미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북한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

□ **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적극 소통, 국내외 지지 및 합의 기반 확대**

○ ‘평화·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’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노력

-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수렴, 정책에 반영하고, 국회와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,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

□ **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존중·준수,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**

○ 미국 등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우리의 한반도 구상을 긴밀히 공유, 대북정책이 국제적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
-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종전선언 추진 노력도 병행

○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해 나갈.

- 남북관계 사업들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

○ 동시에 확고한 한미동맹과 군사대비태세 구축에도 만전, 국민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안보체제 구축 노력도 병행해 가야할 것임.

(끝)